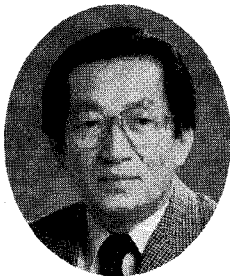




우리 農業의 現주소는?

도시·산업화 및 이농현상으로 농가인구 매년 감소, 경지규모 클수록 부채 높아
현실적·장기적 시책 수립으로 조화로운 농정 펼쳐야 공감대 형성될 것

■ 권원달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농촌경제는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1999년 현재 총 농가호수는 1백41만3천호이고 농가인구는 4백40만명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호당 농가 인구는 3.11인으로 약간 늘어나고 있으나 커다란 변동은 없다. 총인구에 대한 농가의 비중은 9.5%로 일본과 비슷하나 50세이상 농가인구비중은 47.4%로 매년 증가되고 있다. 성별비중은 남자 48.4%, 여자가 51.6%로 여자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취업기회의 확대와 이농현상 때문이다.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른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전화면적이 늘어나면서 최근 연평균 28.9천ha가 줄고 있다. 1999년말 면적은 1백15만7천ha, 밭면적은 75만3천ha이다. 경지면적 변동사유를 보면 건물, 공공시설로 감소한 면적은 25.3천ha인데 개간간척 등으로 증가한 면적은 12.3ha이다. 경지이용 면적은 2백11만8천ha로 전년보다 2만1천ha가 늘어났으나 경지이용률은 110.1%로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농가소득은 호당 평균 2천49만4천원이고 이중 농업소득은 8백95만5천원, 농외소득은 6백97만6천원, 그리고 이전소득은 4백56만3천원으로 농외소득 비중이 34.0%이다. 농업소득은 주로 미곡, 채소, 과수, 축산순이며 농외소득은 노임, 급여, 겸업수입 순이다. 농가부채는 호당평균 1천7백1만1천원으로 생산성부채 76.2%, 가계성부채가 15.6%이다. 경지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중이 높다.

농업생산 형태도 쌀 중심에서 축산, 원예 등 소득작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영농규모도 규모화, 전문화 되고 있다. 쌀재배농가 규모도 3천ha이상 농가수가 1990년의 1만8천호에서 1998년에는 3만5천호로 늘어났다. 시설채소 재배면적도 1992년의 1백55ha에서 1998년에는 2천2백10ha 늘어났다. 축산의 경우도 1998년 현재 1천두 이상 양돈농가는 1천9백호로 양돈농가 전체의 7.2%이나 생산량은 52%에 이른다.

농산물유통개선도 크게 이루어졌다. 공영도매시장이 32개시장 신축계획중에 18개소가 완공되었으며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장점유율도 1995년의 15%에서 1998년에는 24.4%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IMF경

제위기를 맞아 농촌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커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농가부채는 늘어나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에 비해 농가소득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에 대비한 농가소득비는 1990년의 97%에서 1998년에는 80%로 떨어지고 있다. 그외에도 도시에 비해 농촌은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문화혜택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WTO 차기협상에서 농산물 보조금 지원제한과 관세인하가 예상되고 농산물 시장 개방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WTO가입으로 농업부문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다음해 쇠고기가 개방되면 한국축산업은 또한번 위기를 맞게될 것이며 과실, 채소류 수입개방 또한 국내 과수 채소농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농업의 비전- 잠재력·경쟁력 키저

최근 우리농업도 WTO, IMF 체계를 겪으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면서 또 한편으로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비가격경쟁을 통해 우리농산물의 입지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농업에 대한 인식도 단순한 먹거리의 공급에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확산되고 있다. 식량안보, 환경보전, 국토개발, 전통문화의 전승으로서 농촌, 농업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 직접 지불제 도입, 친환경농업 발전 등은 그 예이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니엄 論壇



농촌은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농업은 구조적인 취약성에도 최근 새로운 농업환경을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21세기에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기술이 급격히 발전되고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농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금까지는 토지가 농업생산의 제한요소가 되었으나 생명공학, 전자통신기술이 농업부문에 접합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현되고 있다.

농업분야도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 후계자들이 곳곳에 분산되어 지식기반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수입개방과 IMF체제하에서도 당당하게 경쟁력을 갖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많이 나왔으며 그 잠재력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규모화된 수도작과 축산농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들도 환경친화적 영농으로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농가들이 관행적인 영농을 하고 있고 정부의 농정시책은 지나치게 선도적이고 전시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다. 정부는 농업부문에 많은 투융자를 계속하였지만 생산적으로 활용된 부문이 많지 않으며 실제로 농가가 피부

로 느끼는 정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농업의 내외적 여건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문은 제한되었던 것이다. 최근의 과일 가격 폭락은 근본적으로 수입과일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장차 그 가능성은 더 클 것이다.

**앞으로 지향할 농정 기본방향은
보다 장단기적으로 시책을
개발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농정의 틀이 정부중심의
하향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농업인과 국민중심의 상향적
시책수립이 바람직하다.**

변화되어야 할 농정 과제

지난해의 농정시책은 IMF로 인해 침체되었던 농업을 발전시키고 21세기 새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한해였다. 농산물 소비위축이 계속되고 농업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

려운 여건속에서 다양한 시책개발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1999년도 농정시책을 보면 주곡자급기반 확충 및 재해대비 안정 영농대책,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 신지식 친환경농업 육성, 수출강화와 WTO 차기 협상준비, 농가경제 안정과 농업투융자계획 수립 시행, 그리고 지속적인 농정개혁과 규제개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농정시책들은 새로 제기된 과제들도 많지만 계속적으로 누적된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농업관련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혁한 시책은 농정사에 획기적인 개혁이었다.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한

것과 3개의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농협중앙회로 출범한 것은 획기적인 시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농정은 대내적으로 시책개발이 추진되어도 대외적인 변화가 국내농업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에대한 사전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데 최근의 한·중 마늘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 한·미 쇠고기 분쟁 등은 우리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과의 수입마늘 긴급관세 부과 조치는 한·중무역 마찰을 일으켜 국내 마늘재배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작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 과일가격은 전년대비 36%나 감소하였다. 특히 토마토, 감귤, 배, 참외, 사과, 수박 등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국내산 과일의 생산량과 저장량이 증가된 원인도 있으나 수입과일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1년에 쇠고기 수입개방이 이루어지면 국내 한우사육은 커다란 시련을 겪게될 것이다. 쌀은 2004년에 협상이 재개되지만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농업은 수입개방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농가의 경쟁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통상협상력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농업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볼 때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이 중요하다. 예컨데 정보통신, 생명공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농산물교역 자유화에 따른 급격한 농정여건에 맞는 신축적인 농정대책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개방과 자유화는 계속될 것이며 쌀을 제외하면 식량자급률은 떨어

어지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집중, 농촌의 동공화 등에 적절한 농정추진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21세기를 맞아서 우리농정은 현실적이면서 장기적인 시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능을 수행하고 농업구조조정과 경영혁신으로 국제경쟁력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생산은 소비자 지향적인 식품생산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변화되는 농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정추진 체계도 지속적으로 개혁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향할 농정 기본방향은 보다 장단기적으로 시책을 개발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농정의 틀이 정부중심의 하향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농업인과 국민중심의 상향적 시책수립이 바람직하다. 농업인의 능력과 의욕 그리고 경영혁신을 할 수 있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농업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새로운 농정은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거대한 농정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농민단체, 농업인 간의 역할분담은 물론 특히 협동조합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역할은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농업정책이 타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서 국민이 공감하는 농정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과 자율에 따른 거센 바람에 농업인만이 대응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국민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조화있는 농정을 기대해 본다. **농약정보**